

| 11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531.66  | ↓ 코스닥       | 728.84   |
|                  | (-29.49) |             | (-14.54) |
| ↑ 금리 (미국 9년)     | 2.901    | ↑ 환율 (원·달러) | 1395.10  |
|                  | (+0.012) |             | (+8.70)  |

## 반도체 육성에 AI 필수... 상호의존에도 지원은 온도차

산업계, AI 기술중심 시장 재편 여당,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AI기본법 논의는 ‘거북이 걸음’ 초격차 보완위해 함께 속도내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인공지능(AI)법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AI 기술 및 관련 기업의 육성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 개정은 코앞에 놓여 있지만 AI기본법은 논의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반도체는 AI 신기술의 핵심 하드웨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여부가 곧 AI 기술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셈이다. 동시에 발전한 AI 기술은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계 배경 또한 AI와 반도체 간 상관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며 AI반도체를 출현시켰다. AI와 반도체가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는 둘을 결합한 형태로 나아간 것이다. 즉, AI기본법이 반도체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두 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차이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1위 수출 품목으로 세수이익에 크게 이바지 하지만

AI기술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AI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AI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성과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계속해서 수출액이 커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개발 속도에 불이 붙고, 글로벌 산업계의 큰 변동성 아래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법안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AI기본법은 현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앞서 여야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학 분야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예산 증액과 AI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AI기본법은 현



전국으로 배부되는 수능 문답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

/뉴스1

재까지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AI기본법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입법을 촉구하는데에는 명확한 규제선 없는 개발이 이뤄졌을 때 이중, 삼중 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또 AI가 전세계 산업계를 뒤흔들면서 기술 초격차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력에까지 이르는 만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지출 늘어나는데 소득은 ‘찜뚱’ 생계유지 위해 ‘또 대출’ 악순환

### W 경제의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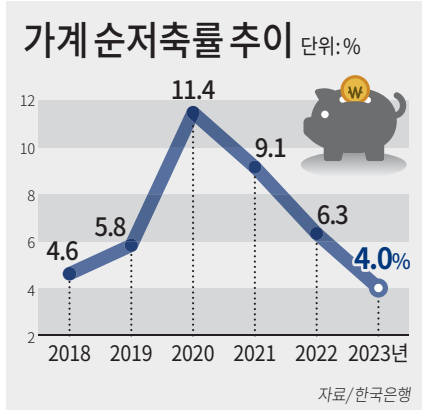
#### <下> 저축률 감소세

가계 순저축률 4.0%, 10년來 최저  
물가상승에 소득 둔화·이자도 늘어  
생계자금 고금리 2금융 대출 의존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2세)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한 돈을 모으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한달 식비가 60만원에서 80~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금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월 상환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엿볼 수 있는 ‘가계 순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재정적 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



년 가계 순저축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 물가상승... 소득 2.6% 증가할 때 소비 5% ↑

가계 순저축률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계 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과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美 증시 ‘트럼프 랠리’에 짐싸는 개미들

관세 강화 예고로 수출주 타격  
“국내 주식 박스권 지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트럼프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 증시는 관세 정책 강화 예고로 수출주가 타격을 입으며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2.0’ 시대에 국내 증시 부진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49포인트(1.15%) 하락한 2531.66을 기록했

다. 장초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도 1.96% 하락하며 728.84에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한 모양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 효과로 최근 거래일인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미국 3대 주가지수(S&P500, 다우존스산업평균, 나스닥)가 모두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특히 S&P500은 올해만 5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절, 코스피는 2016년 대선 당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3.48%까지 올랐으며, 3개월 후에는 S&P500과 코스피가 6%대 동반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1월부터 임기말인 2021년 1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0%, 56%가량 오르며 ‘트럼프 랠리’에 동승했다.

현재 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여론조사 조작 수법 설명”  
/사진 뉴스1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찰 압박법’ 다시 속도

▲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활동” 손경식 “상법개정안 기업 위축시켜”  
▲ 8년 만에 골프채 잡은尹... ‘골프광’ 트럼프와 ‘버디’ 될까



▲ 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전향적 노력 해야”  
▲ 우원식, 트럼프에 축하 서한... “한미동맹 더욱 발전 확신”  
/사진 뉴스1